

#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총력'

### "균형발전의 새로운 기회" ... 전북자치도-남원시-전북 지역·연고 국회의원 등, 유치 필요성 강조

전북자치도가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총력전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국회의원 및 연고·동행 국회의원, 남원시장 등 16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날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2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의 교육과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간 5천 명 이상의 인원이 교육받게 될 예정이다. 남원시에 학교가 설립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3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300여 명의 상주 인력이 유입돼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호남 교통 중심지인 남원은 광주-대구 고속도로, 순천-완주 고속도로, KTX·SRT 등 교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으며, 오는 2030년 개통 예정인 달빛 철도까지 더해지면 접근성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남원시 후보지인 구 가축유전 자원시절장 166만여㎡는 기제부 소유(99%) 국유지로 토지 매입비용이 없어 즉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다. 다른 경쟁지 토지비용이 수백억 원,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대조적인 상황으로, 이는 정부의 긴급재정 기조에도 부합하는 장점으로 꼽혀 남원시 제2 중앙경찰학교 입지로 최적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서남대 폐교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있는 남원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제2 중앙경찰학교 등 획기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 중앙경찰학교



제2중앙경찰학교 전북자치도 유치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기자회견이 지난날 3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를 포함해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국립경찰병원, 경찰수사연수원 등 교육·연수시설이 충남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 균형과 지역소멸 완화를 위해 분산배치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은 남원 유치를 위한 초당적 협력도 약속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남원의 제2 중앙경찰학교 유치는 단순한 지역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현명한 결정

을 촉구했다. 특히, 남원에 지역구를 둔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남원은 후보지 중에서도 개발 적정성과 교통 접근성을 고루 갖춘 최적지"라며, "지리산과 같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중앙경찰학교 설립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도 "남원은 영호남 남부권 경찰관 교육생들의 접근성과 국토 균형발전, 설립 예정지는 국유지로서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원이 학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 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의 성공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에도

남원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과도 지속적인 홍보와 유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총청원은 이미 중안부처와 대기업이 불려 있어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충청권에 집중된 개발을 남원으로 분산시켜야만 국가균형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내달 후보지 3개소에 대한 부지 실사 및 기관 면접을 거쳐 2차 평가를 갖고 오는 11월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남원=김기두 기자

## 혼자서 1년동안 4000건 수술? 일반 의사들 "대리 수술" 의심

### 5년 6개월간 71명 대리 수술 적발 의사·간호조무사·치과의사 순 민주 박희승 의원 "환자 생명 보호 위해 엄정한 법 집행 이뤄져야" 강조



의사 1명이 혼자서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며 12억 이상을 청구했다. 일주일 중 하루만 쉬는 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 13건의 수술이 진행된 것으로 사실상 대리 수술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71명의 의사 등에 대해 대리 수술·유령 수술(교사)을 이유로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행정처분은 징역이나 벌금 등 사법처리가 이뤄진 대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대리 수술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부위 절개 및 지혈, 인공관절 삽입을 위한 천공 등 직접적인 수술행위부터 소독, 드레인제거, 석션까지 다양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매년 평균 3천 건 이상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혼자서 진행하면서 해마다 12억 이상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같은 수술을 2번째로 많이 한 의사에 비해서도 2배 많은 수이다. 대리 수술 논란이 있는 병원의 의료진은 "인원이 부족해 간호조무사를 수술 보조로 활용한 것"이라 밝혔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에서 간호조무사가 PA로 활용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일반 의사들도 "1년에 4,000건 이상 수술한 것에 대해 대리 수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박희승 의원은 "적발되더라도 최종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재교부될 수 있어 대리 수술·유령 수술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환자의 생명과 인권 보호를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 수술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 '지자체 예치 108조원 금고 이자율, 기준금리에 못미쳐'

### 3.5%에 못미치는 2%... 민주 한병도 의원, "지자체 재정관리 업무 태만, 금고 이율 적정 수준인지 행안부는 손 놓고 있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108조원의 이자율이 기준금리 3.5%에 한참 못미치는 2% 수준으로 드러났다. 이자율이 0.1%도 안 되는 지자체도 있어 금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아산, 국회 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별 금고에 예치된 현금성 자산 108조5,887만 원 대비 이자 수입은 2조5,207만 원으로 평균 이자율이 2.32%에 불과했다.

한편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이자율이 가장 낮은 지자체 및 주·부금고는 △경북 울릉군(농협은행) 0.03% △경



북 안동시(농협·신한은행) △경기 과천시(농협은행) 0.48% △경기 광주시(농협은행) 0.49% △충남 계룡시(농협은행) 0.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자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충남 서천군(농협은행) 6.92% △부산 해운대구(부산·농협은행) 6.71% △전남 여수시(농협·광주은행) 5.39% △서울 강남구(신한은행) 5.36% △경기 이천시(농협은행) 5.18% 등이었다. 이자율 구간별로 보면 0.1% 미만

지자체 금고 2개 △0.1%~1.0% 7개 △1.0%~3.0% 187개 △3.0%~3.5% 24개 △3.5% 이상 23개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금은행 저축 시 수신 금리가 3.7% 수준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거액의 세입을 예치하고도 관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광역자치단체별로 평균 이자율이 낮은 곳은 △세종 0.89% △대전 1.42% △경북 1.76% △대구 1.79% △울산 1.98% 순이었다. 반면 평균이자율이 높은 곳은 △제주 3.53% △서울 3.42% △광주 2.72% △전남 2.54% △부산 2.51% △인천 2.26% △전북 2.34% 등 순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는 국민 세금

으로 조성된 세입 관리에 손 놓고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금고 이율이 적정 수준인지 점검하고 지자체별 자금 운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규정 약정서(비밀유지 협약)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 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는 은행 금리이다. /이만호 기자

## "국감 통해 용산 정권의 실정 추궁"

### 민주 이성운 의원, '제2회 이심전심 소통의 날' 개최 시민 120여명 참석... 지역구 현안 관련 의견 교환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은 지난날 28일 전주 효자동 서곡지구에서 '이성운에게 바란다!李明全심소통의 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李明全심소통의 날'은 이성운 국회의원과 지역 시·도의원, 보좌진들이 함께 전주시 곳곳의 현장에서 '너 큰 전북, 더 잘사는 전북'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 소통의 장으로서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제2회 '이심전심 소통의 날'에는 약 120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열린 토론과 소감을 이어갔다.

현장에서 소통한 주요 현안으로는 △홍합길 맨발 걷기 공간 조성 △서곡공원 내 무궁화 이식 문제 해결 방안 △메타세콰이아 및 잣나무 가루 날림 피해 해소 방안 △서곡초 및 예담교교 앞 도로 보수 △마전교 파크 골프장



주차장 △방방산 터널 관련 교통 민원 등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성운 의원은 "배추 한 포기 2만 원에 육박하는 시기가 현실로 다가왔는데도 윤석열 용산 정권은 민생대책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하면서, "10월부터 개최되는 정기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매섭게 추궁하고, 더 큰 전북, 더 잘 사는 전북으로 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의무 반영돼야"

### 민주 정동영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 발의 나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은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구 획정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선연적 규정인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규정을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 획정안에는 '인구감소 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반영 및 그 이유'가 명시되도록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획정시 하한선과 상한선을 기준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



역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에 국회의원선거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의무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동영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으로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농산어촌의 경우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한철·이정미·서기석 헌법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내고, "도 농간 나타나고 있는 경제력의 현저한 차이나 인구 격차는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지역 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국회의원의 지역 대표성은 투표 가치의 평등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판시한 바도 있다. 정동영 의원은 "지역소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촌지역 지역 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현재에서도 소수의견으로 적시된 바 있다"며,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간 균형과 공정한 대표성 확보를 위해 인구 기준을 2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의 법률안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에서 공동발의가 이뤄졌다. △전북특별자치도 김운덕(전주갑)·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이원택(군산·김제·부안)·이춘석(익산갑)·한병도(익산을) 의원 △광주광역시 조인철(광주서구갑) 의원 △전남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의원 △경기도 이기현(경기 고양시병)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충남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 △비례대표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전라지역) △비례대표 박홍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만호 기자

## 윤수봉 전북자치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완주 1)이 '제11대 전반기 대한민국의회의 운영위원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수봉 의원은 지난날 30일 충남 당진시 심훈기념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수봉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2018년 이후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방의회법을 발의했으나 반반히 '입기만료 폐기'되었음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대가 높은 제22대 국회에서만은 지방 의회의 자율성·독립성을 확고히 보장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안건 제시 '눈길'

###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시도의회회장협의회서 감사기구 의회 이관·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등 건의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날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5차 대한민국의회의 회장협의회에서 현재 지자체에 속해 있는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로의 이관, 지방의회 3급 직위 신설 및 교육감 소속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조속히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권한은 여전히 자치단체장에 의해 임명받은 감사기구의 장과 지자체 소속의 감사기구에 있어, 직무수행의 독립성과 공정·투명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자체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사 권한을 지닌 지방의회로 감사기구를 이관해야 한다는 이번 제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이번 아니라, 인사권 독립에도 불구하고 2급 사무처장 아래 3급 국장 직위 없이 4급 담당관 체계로 지속되고 있는 광역의회의 기형적 조직구조를 정부에 건의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각종 사무에 관한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그 역할과 기능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사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